



이재명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윤석열 대선후보가 26일 영등포구 필승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심상정 대선후보가 2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안철수 대선후보가 26일 마포구에서 열린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오미크론 신속하게 대응”

청와대서 점검회의...의료진 사기진작 당부

“자가진단키트 수급체계 세밀하게 신경 써야”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오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 속도를 빨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본격적인 방역 성과는 지금부터 (나오는

것)이고 K방역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병상 확보에 성과를 냈지만 오미크론 증가 속도에 따라 여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면서 “특히 소아 병상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



기지도 생산물량이 증분해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자가진단키트 수급체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초기에 세밀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이 확산함에 따라 최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지나친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면서 “길게는 한 달 전부터 오미크론 대응을 준비했는데 그 상황을 국민께 자세하고 자신 있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청와대에서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3,0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는 것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종전 최다 기록이었던 전날 8,571명보다 4,441명 많은 수치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센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곧 하루 확진자가 3만~4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주 4.5일 근무제 추진”

전국민 고용·산재 보험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주 4.5일 근무제’ 추진 및 전 국민 고용·산재 보험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국민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의 강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는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

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켜겠다”고 밝혔다.

또 “일터에 오래 머무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라며 연차 휴가 일수 및 소진율의 선진국 수준 향상, 포괄 임금 약정 제한, 가족 돌봄 휴가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또 “우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하는 추가 보상제도 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 추가 보상제도와 관련해 “경기도 수준인 7~8% 정도의 평균 비정규 고용 불안에 대한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건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국 동네병원서 코로나 검사...PCR은 고위험군만

내달 3일부터 전국 확대...오미크론 방역체계 강화 항원검사 시행...29일부터 선별진료소서 키트 제공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동네병원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대폭 변경된다.

기존의 진단검사 체계로는 폭증하는 확진자를 모두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 중심으로 신속히 환자를 찾아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대응 역량을 집중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는 전국의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의 동네병원들도 코로나19 진단·검사

에 참여하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제 동네 병·의원도 참여하는, 중증환자와 고위험군 중심의 진단검사 체계와 역학조사 체계 전환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는 이날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외 검사 희망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

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의원에서 일차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뒤 양성 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이들 4개 지역의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새로운 진단검사 시스템이 시행된다.

전국적인 확대 시행에 앞서 정부는 오는 29일부터는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하고 싶은 국민들을 위해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선별진료소 PCR 검사 줄어 너무 길거나 바로 결과를 알고 싶다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급받아서 바로 검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면적인 체계 전환이 이뤄지기 전인 다음 달 2일까지는 전국 선별진료소

에서 PCR 검사도 원한다면 받을 수 있고,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빠른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의 동네 병·의원도 호흡기 클리닉 등의 형태로 이러한 검사 체계에 동참한다. 현재 전국에는 총 431개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찰·검사·치료가 함께 이뤄지면 우리는 오미크론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소도 확진자 선별·관리 업무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동네병원들이 진단검사 체계에 참여하는 다양한 모델들을 협의 중이며, 세부 내용은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재명·윤석열 양자 ‘TV 토론’ 불발

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실시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당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재판부는 우선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 방송 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보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횟수, 형식, 내용구성뿐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방송토론회가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TV 방송을 통해 이뤄져 ▲ 후보자가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운동인 점과 ▲ 유권자가 토론 과정을 보며 정책,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한 뒤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들었다.

이런 점에 비춰 재판부는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국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며 안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airpurifier DK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